

이달의 법령정보

■ 건축 관계법령 일부 개정 시행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증전	현행(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17호)	'23.09.12	'24.0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 강화 (제19조제11항 개정) - 허가권자는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u>지체 없이</u>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권자는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u>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도록 함</u>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23.11.1	'24.0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 관련 세부사항 (제19조의2제3항~제6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보가 이중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사항 정함 - 이중배치 알림 승인권자 및 수탁기관 정함 - 대한건축사협회의 이중배치 확인 자료 정함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20호)	'24.3.19	'24.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주택 30제곱미터 미만 요건 폐지 및 지하층 세대 설치 금지 요건 신설(제10조 제1항 제1호 다목 개정) - <u>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u>

건축계 소식

‘월간 건축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창간 58주년, 지령 659호 맞아 뜻 깊은 성과
대한건축사신문도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 추진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전문매거진 '월간 건축사'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종교지 부문 '2024 우수콘텐츠 잡지'에 선정됐다.

우수 콘텐츠 잡지는 잡지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잡지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잡지를 선정한다는 취지다. 매년 학계,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국내에 등록된 창간 2년 이상 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심사해 결정한다. 시사·경제·교양, 여성·생활정보, 문화·예술종교, 과학·기술 등 총 8개 분야에서 100종 내외의 잡지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잡지는 공공도서관 등 문화 소외 지역과 재외문화원, 해외 도서관 등에 보급된다.

1966년 7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지로 창간된 월간 건축사는 작년 9월을 기해 교보문고 등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를 시작, 지령 659호를 맞아 이 같은 뜻깊은 성과를 얻게 됐다. 월간 건축사는 지금의 한국 건축문화를 일군 건축사의 건축작품과 비평 등을 싣고 있으며, 건축담론과 건축계·각계각층 인사 인터뷰, 해외건축동향, 에세이, 미술·광고 등 건축문화예술 기획 등을 게재하며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건축전문지를 표방한다. 특히 창간 후 58년 넘게 발간해 온 까닭에 그 제목만 둘어봐도 한국 근현대건축사의 맥락을 알 수 있을 정도다.

한편, 협회는 올해 상·하반기 심사가 예정돼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의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도 추진한다. 신문을 국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색 엔진에 실리게 함으로써 더 많은 독자에게 콘텐츠를 노출해 신문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독자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네이버 제휴 때 페이지 뷰 및 이용자가 10배 이상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온라인 신문 주간 페이지뷰(1만~4만 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매체의 전반적인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국건축규정 부산지역 설명회…건축사협회, 한국건축규정은 세움터에 탑재되어
4월 부산, 대구 시범운영 이후 5~6월경부터 전국 전면시행 예정

한국건축규정과 연계된 설계도서 품질기준 마련해
민간대가 기준 가속화·건축허가 기간 단축 기대

앞으로 '한국건축규정 시스템'을 통해 건축허가 업무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예측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건축사들의 업무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관련 업무의 불확실성 때문에 건축주와의 마찰, 업무 지연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돼 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3월 20일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한국건축규정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건축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 할 법률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해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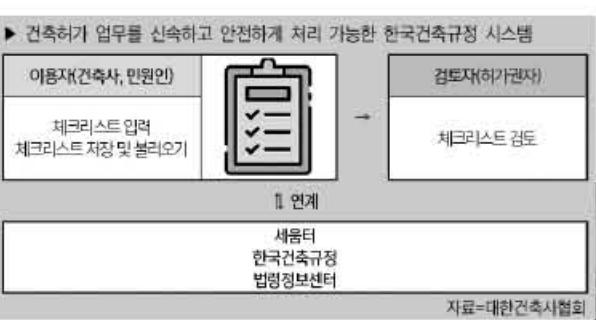
한 것이다. 공고 후 국토부는 대한건축사협회를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고시한 바 있다.

협회는 한국건축규정 시스템을 세움터 내 정보체계를 기반으로 법령목록과 체크리스트가 반영된 형태로 운영에 나선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설계자는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규정과 요구 사항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허가권자(공무원)는 이를 빠르게 검토해, 건축허가 과정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법령 목록,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여 건축 프로젝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건축 관련 업무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408개의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건축규정 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의제처리 법령 등 중요한 170개 조항에 대해 쉽게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설계자는 시스템상에서 생성조건(지역지구, 건축물 용도, 층수, 연면적 등)을 통해 작성하는 체크리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건축사들은 더 적은 부담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한국건축규정 시스템 설명에 나선 대한건축사협회 강주석 법제정책처장은 “매일 새로운 법령이 생기는 상황에서, 개인이 모든 것을 따라가기는 한계가 있다”며 “세움터 내 정보체계 시스템을 통해 법규가 꾸준히 업데이트 등 관리되고, 체크리스트 작성 중 궁금한 법령은 한 번의 클릭으로 원문을 확인할 수도 있어 편의성과 확장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강주석 처장은 또한 “회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이달 말에서 늦어도 4월 초 사이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했던 유사한 프로젝트는 저장하고 불러오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대가 기준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건축 설계도서의 품질을 담보하는 일인데, 우수한 품질의 표준 샘플을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민간건축 설계도서, 민간대가 기준 마련도 빠르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령 및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전수 조사 후, 이를 토대로 정비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반영해왔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이택준 건축사, 화재복구 성금 2,000만 원 기부

충청남도건축사회 이택준 건축사(주.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는 3월 4일 충청남도청 외부접견실에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청남도지회(충남 사랑의 열매)와 손잡고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복구 성금으로 써달라며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는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을 위해 활용하고,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축사협회-법제처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설명서 만들기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협회, 빠른 이해 위한 건축법 내 문장 정리 제안

건축 관련 약관·계약서·설명서 정비 관련 간담회가 3월 14일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 관련 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의 어려운 법령 용어와 복잡한 문장 정비를 위해 관계 기관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제처에서 주관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이 참여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업계 전문·관용어의 순화 방안 ▲건축법 내 혼재된 기준 통일 ▲주택 종류의 단순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시공 안내서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협회 측은 “건축사는 업무 진행을 위해 건축법과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하는 편이다. 올바른 법률 해석과 빠른 이해를 위해 법률안의 문장 정리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은 “계약서, 약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관점에서 행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

